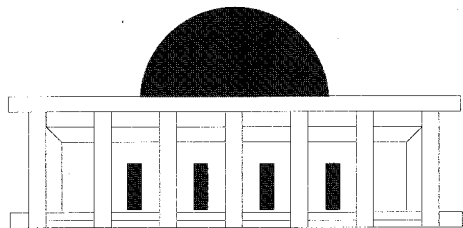


쌀협상 국정조사 관련 진행상황

여야 정치권이 쌀협상 국정조사에 합의함에 따라 쌀 협상의 새로운 정세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쌀협상 국정조사가 형식적인 국정조사로 전락할 전망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6월 국회비준을 승인해 주는 국정조사로 될 가능성이 높아 쌀 협상과 관련하여 한농연에서는 세부적이고 강력한 대응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쌀협상 국정조사의 관련 진행사항 및 쟁점 사항을 알아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국정조사 배경 및 동향

이번 국정조사는 4월 초 발표된 쌀 협상 부가합의 사항과 관련하여 농민단체에서 제기한 ‘이면합의’에 대해 야당에서 4.30 재보선 즈음하여 열린우리당에 제시하였고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기밀유지를 전제로 제한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 이에 재보선이 끝난 후 여야 원내대표는 쌀협상 국정조사를 합의, 지난 12일 오전 첫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부가 외국 혹은 국제기구와 벌인 협상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첫 조사라는 점에서, 농업통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많은 농민단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예비조사에 참가하는 통상협상전문가들에게 협상 원문을 비공개로 하고 국정조사 범위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등(비교섭단체 제외) 부실 국정조사 우려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 국정조사 개요

○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열람(단, 비밀로 분류된 자료도 열람가능),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 및 감정, 조사와 관련된 기관 방문조사 등이 진행된다. 또 예비조사 청문회 등 조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방법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여 회의 및 관련 문서 공개, 조사결과 보고서 공개 범위 등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기간

이번 조사대상 기관은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가 포함되었으며, 증인 및 참고인은 협상 실무자와 농민단체 대표 등 여·야 합의하에 결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지난 12일

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5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오는 26일부터 27에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조사의 백미인 청문회는 다음달 13일부터 14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조사위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열린우리당 6명, 한나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조일현의원(열린당, 홍천·횡성)이 내정되었고, 열린당에는 신중식의원(간사, 고흥·보성), 신학용의원(인천 계양을), 이시중의원(충주), 이영호의원(강진·완도), 최성의원(고양 덕양을)이 내정되었고 한나라당에는 이방호의원(간사, 사천), 김영덕의원(의령·함안·합천), 김재원의원(군위·의성·청송), 정문헌의원(속초·고성·양양), 홍문표의원(홍성·예산) 비교섭단체에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비례) 등이 포함되었다.

3. 쟁점사항

구분	정부	농민단체	
이 면 합 의	쌀 이외 품목 양보 요구 공개	쌀 이외 품목 양보 요구 공개양자 간 협상 내용을 공개하면 협상 상대국이 추가적 요구 할 가능성 높음	쌀 이외 품목 양보 요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이 면 합 의 여부	WTO 검증기간 중 양자 간 협상을 통해 공식문서 형태의 별도 합의 있을 것이라고 밝힘(12.30 발표문)	쌀 이외 다른 품목에 대한 합의는 없다고 밝힘(허상만 장관 국회 답변)
	타 품목 협상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서는 상대국이 수락 가능한 대가 지불 당면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은 쌀과 관련한 협상만 진행해야 함
수입위협평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써 검역 절차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아님	수입허용을 전제로 한 가능성이 높음	
쌀 협상 결과	관세화 유예 20년간 연장 국가는 우리나라로 현실 인정 필요, 불가합의도 많이 양보한 것이 아님	의무수입물량, 농산물 검역 및 관세 부문에 많은 양보로 협상 실패	
기밀유지	관련국가기밀이므로 제한	제한 최소화	

4. 향후 전망

이번 국정조사는 정부가 외국 혹은 국제기구와 벌인 협상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첫 조사라는 점에서, 농업통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농민단체 및 사회시민단체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통상협상과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져서 농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되 이면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협상에서 불가합의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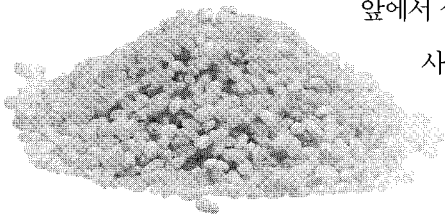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이면합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부가 쌀과 직접 관련 없는 다른 품목으로 양보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합의 과정에서 6월 임시국회 쟁점이 될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등 민감한 사안을 함께 거론하여 국정조사의 수위에 대해서 양당간 의견조율을 거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여야(비교섭단체 제외) 모두 쌀협상 국회비준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너무 부각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가 6월 국회비준을 승인하는 형식적인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도 국정조사특위가 여야동수로 구성됨에 따라 여당이 ‘가부동수 부결’을 이용해 충분한 조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면합의 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한계가 있어 국정조사 성과가 미약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5. 한농연 대응활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국정조사가 6월 국회비준을 승인을 위한 형식적인 조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여야 동수(가부동수면 부결)등 국정조사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조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농연 등 많은 농민단체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한농연에서는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정부 협상전략 문제점 및 내부 협상 미흡 등을 집중 부각시킬 전략이다. 실제 정부는 쌀협상 과정에서 UR 협정문을 언급하며 자동관세화론을 주장하다가 관세화 의무 발생론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일관성 없는 협상 전략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쌀 협상 추진과정과 국내 대책 수립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우리 농업계와 충분한 내부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정당 지도부 및 국정조사 위원 면담을 통해 한농연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며 국회의원 소환 운동과 국정조사 특위 지역구 시군회장님을 통해 정치권 압박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비준 반대 각 도별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근조 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이번 협상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대국민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한농연 내부 선전 및 조직을 강화하고 국정조사 추이에 따라 국회비준 반대 투쟁 전개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국정조사가 쌀협상 국회비준을 위한 형식적인 조사가 될 경우 모든 국내 여론과 투쟁의 명분이 농민단체에 주어지는 만큼 한농연은 향후 6월에 예정된 릴레이 농민대회를 통해 대정부 강경 투쟁의 중심에 설 것이다. 그리고 연말 발생할지 모르는 '쌀 대란' 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하반기 투쟁의 명분 축적과 동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6. 주요 요구사항

-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농업통상협상 전문가의 참여를 전제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국정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들 농업통상협상 전문가들에게 쌀 협상 관련 전체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열람권을 부여할 것
- 쌀 협상 이면합의 관련 국정조사 진행과정 및 결과를 350만 농민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표할 것

- 쌀 협상 이해당사국과의 양자간 협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사항에 포함시킬 것
- 농업통상협상 진행시 '밀실협상' '이면합의' 등 지금까지의 패단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

7. 참고사항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 일시 : 2005년 5월 12일(목) 10:00 ~ 11:40
- 주요 내용
 - 예비조사반 구성 :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2인, 위원별 1인 추천 전문가 12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4인 등 총 19인
 - 비공개 자료 열람권 : 각 교섭단체별로 비취인가가 있는 외부전문가 1인이 열람 가능
 - 증인 및 참고인 선정 : 증인 21인(재경부, 외통부, 농림부, 해수부, 서진교, 김충실)
참고인 4인(한농연 손재범 실장 등)
 - 회의 공개 :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
- 향후 일정
 - 5월 26일(목) 10:00 : 기관보고(해수부, 농림부)
 - 5월 27일(금) 10:00 : 기관보고(외통부)
 - 6월 13일(월), 14일(화) 10:00 : 청문회